영국 · 호주의 기업살인법

날짜 / 2015년 10월 27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주최 /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연대

대표 참가자

마이클 케인 / 호주 운수노조 사무부총장

호주에서 세월호 가족 슬픔을 같이 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에릭라르선 / 노르웨이 기관사노조 (국제운수노조)

투쟁에 연대 계속 하겠다.

마르틴 메이어 / 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오랫동안 버스 운전 했다. 버스 노조 대표해서 활동했고, 국제운수노련 활동 중. 이 간담회를 통해서 평화, 사고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6연대 인사말

지난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국회농성, 광화문 농성, 유민아빠의 46일 단식, 이어지는 시민의 릴레이 단식 등을 하고 1천만 국민의 서명을 받는 특별법 제정 싸움을 했다. 농성 집회 싸움 통해 2014년 말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올해 1월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416가족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안산분향소에서 팽목항까지 인양을 촉구하는 도보순례를 시작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0만이 넘는 서명으로 통과된 특별법으로 국가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된 게 지난 3월이었다.

1주기를 맞이하는 4월에는 정부에 쓰레기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투쟁이었다. 특별법을 흔드는 하위 개념인 시행령을 누가 진실을 파헤치려는걸 두려워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행령을 정부가 만들었고, 그것을 폐기하라는 요구가 높았던 것이 4월이었다.

1년 동안 싸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애썼던 우리들은 누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고 이 싸움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6월에 416연대를 출범함. 416연대는 가족협의회와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들이 하나가 되는 단체이다.

특별법을 흔들고 특조위를 흔들려는 정부의 여러 시도 속에 7월에서야 비로소 첫 출근을 할 수 있었고,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80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의 인양은 진행되고 있지만 투명하게 그 과정을 가족들에게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묵살되고 있어서 416 가족 협의회가 동거차도라는 인근의 섬에 들어가서 감시를 시작했고, 12월까지 계속될 것이다.

피해자 가족 중에 130여 가구 422명은 정부의 배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단원고의 아이들이 살아서 숨쉬던 공간을 교육의 장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에 맞서서 그것을 존치하려고 특별팀을 꾸려서 활동 중이다.

416연대에는 주요 과제 - 4개의 위원회

수습과 인양위원회 / 인양과정에 가족 참여하고, 투명한 공개, 철저한 유실방지를 위해서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모니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활동 중. 대부분 묵살되고 있다. 특조위 예산에 인양조사 예산 보장, 인양조사권 동시에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 / 정부는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를 계속 흔들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활동시한을 축소시킨 것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국회와 협상 중에 있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안전사회위원회 /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취지와 맥을 같이 하는데, 중대재해에 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법에 관한 입법을 촉구 중이다. 우리사회에 요청되는 안전사회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존엄과 권리 위원회 / 416인권선언 제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회복을 위한 과정, 1년 여에 걸친 각 분야의 풀뿌리 토론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또 하나는 순직처리 못한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고, 민간 잠수사에게 구조 책임을 뒤집어 씌운 해경에게 다시 그 책임을 돌려야 하므로 민간잠수사 피해보상을 촉구 중에 있다.

416연대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로, 회원을 모집 호소하고 정부가 416연대 탄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성호아버지 이야기 (416연대)

오늘이 560일째다. 특별조사위원회가 3월에 생겼는데, 실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을 받은 것은 8월이 넘어서다. 지금은 어떤 것을 조사할지 사건 신청을 받고 있는 중 이다. 사건 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아직 아무 일도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다. 그리고 아직 세월호 안에 9명이 있는데 정부는 모든 것을 지우려고 하고 있고, 학교에 그들의 자리마저 치우려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내년 6월 정도에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끝내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한 조사를 위해 이후에도 최소 6개월 이상을 조사하고 활동하게 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세월호가 올라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내년 6월이나 7월경에 끝내려고 하는 시도에 맞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거차도 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해수부는 "가족들이 위험하다. 그리고 작업하는데 외국인들이 작업을 해서 작업에 위화감이 조성된다" 며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있다. 저희 가족들은 9개월 이상 바지선을 탔던 사람들이다. 팽목에서, 그 맹골수도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유들은 너무 말도 안되서 지금도 계속 동거차도에 감시를 가고 있고, 다음 달에도 계속 간다. 12월까지 정부가 인양을 위해서 한다는 작업들이 진로 확보하고, 유실 방지하고 기름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걸 12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내년에 3월 지나서 인양을 본격화 하겠다고 한다. 6월이나 7월까지. 인양과 동시에 모든 조사활동을 끝내려는 시도에 단호히 계속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진상규명 관련해서 말하고 싶다. 가족들이 생각하는 진상규명은 관련자들, 참사를 일으킨 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가족들이 생각하는 진상규명이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살인법 관련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그것이 구조를 못한 사람이든, 그들이 잘못한 부분만큼 합당한 벌을 받아야 그것이 또 다른 참사로 반복 되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한다. 저희 아이들은 이미 다 떠났지만, 그것이 또 다른 참사로 이어져서 고통 받는 것을 꼭 막는데 저희들이 꼭 나서야 겠다는 생각으로 함께하고 있다.

강문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멀리서 와주신 것에 환영의 말씀 드린다. 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다. 우리는 노동자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하는 단체와 시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단체다. 이전부터 영국과 캐나다, 호주의 관련법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4 • 16 사건 이후에 그런 문제의식들을 더 구체화해서 이 단체까지 만들게 되었다. 현재 외국 법을 참고하고 한국 특수성을 감안해서 법 초안을 만들었다. 그 법을 국회에 청원 해놓았고 현재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오늘 해주시는 말씀들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영국과 호주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결국 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의 취지나 운동의 과정 설명을 부탁드린다.

마르틴 메이어 (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시작 전에 다시한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슬픔과 분노를 확인하며,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영국 티비 뉴스에서 세월호 참사를 보았다. 영국에도 1987년에 비슷한 선박침몰 사고가 생각이 났다. 193명이 사망했다. 여러 가지 위험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하루에 최대한 많은 운행을 하기 위해 문을 안 닫고 출항을 하는 습관이었다. 결국 물이 들어와서 침몰한 사고 였다.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운행기업 경영진을 고발하고 재판을 시작했는데 결국 충분히 증빙 되지 못해서 선고가 내려지지 못했다. 그 때 노동조합이 그 사고를 보고 우리가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큰 사고가 있었다. 2004년, 철도가 민영화 된 후에 발생한 사고다. 민영화 이후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소홀히 하게 돼서 철로에 안전 문제가 있었다. 열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 나서 4명이 숨졌다. 노동조합도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역시 법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무너지고 대응하지 못했다.

이미 건설현장에서도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노조도 이 사고 이후에 힘을 합쳐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연대체를 만들고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노조가 앞장서서 법 제정투쟁을 한 것이다.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산재사망이 생겼을 때 재판을 통해서 기업을 처벌을 하고자 했으나 법 제도가 워낙에 미약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법위반판결만을 받고 결국에 관련자가 적은 벌금만을 내고 넘어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었다. 변호사들도, 실제 책임을 져야 할 과실에 대한 책임 등을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

노조가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법안을 만들었고, 제일 먼저 우리에 친화적인 영국 노동당 의원을 접촉해서 제정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을 많이 접촉했고 그 중 일부 주요 언론들이 우리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어 법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노동당이 집권할 때 정부로부터 법 제정들 약속 받았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해야 법이 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도 계속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 중요했던 것은 노동조합의 힘이었다.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전문가들이 충분히 법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고 결국 노동당 내에서 법 제정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호의적인 여론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도입하고 싶은 법이 되었다.

결국 아주 큰 투쟁을 했고 2007년 법이 제정되었다. 일단 환영은 했으나 우리가 원한 만큼 강한 내용은 아니었다. 우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나 기업 사장 개인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징역까지 물을 수 있는 법을 요구했으나, 결국 그 수준까지 쟁취하지 못했다. 기업은 처벌할 수 있는데 개별 경영진은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법안 내에 처벌수준 명시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명시 못했다. 지금 이 법을 활용해서 처벌 사실을 묻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처벌수준이 충분하지가 않다.

법 제정 4년 후 첫 사건이 있었다. 첫 재판의 사건은 지하에서 일하다가 땅이 무너져서 죽게 된 한 노동자에 대한 사건이었다. 그 사고만 봤을 때 기업이 노동안전이나 건강에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고소하고 재판에 갔는데 결국 높은 수준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그 이후에 20-25건의 사건이 이 법에 근거해서 처벌했다. 다행히 세월호 참사만큼 큰 사고는 없었지만, 최소한 지금은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마이클 케인 (호주 운수노조 사무부총장)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얘기 해봤으면 좋겠다. 정부는 진실을 은폐한다. 한국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는데 뒤에서 정부를 유지해주는 기업이 있다.

이 투쟁은 불균형인 이 사회의 균형을 잡기 위한 투쟁인 것 같다. 정부나 권력 대기업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에 맞서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투쟁이다. 들은 내용에 감동을 받고 있다. 이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

중요한 점은, 기업 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 뿐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되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세월호 투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제도가 다른 7개의 주 중 5개 주에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특히 사업 운영 중 발생된 사고의 과실에 대해 경영진 개인의 책임을 묻고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법인은 되지만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기업의 고위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감옥까지 갈 수 있어야 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책임이 중요한데, 호주 법체계 중에서 한국에서도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5개 주에 이런 법 제도가 있고, 기업 고위 경영진이 구속될 수 있고, 4개 주에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만약 사망위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그 책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경영진을 구속할 수 있다. 호주 법 제도에서 노동안전보건법 안에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고위 기업 간부들이 노동조합 뿐 아니라 그 관리하는 사업장 내에 어떤 시민이 사망의 위험에 처하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영국 동료가 말했듯,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노동자 단결된 힘이나 시민의 관심과 여론, 많은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이 움직이고 법 제정이 가능하다. 호주에서 다양한 투쟁이 있었다. 주로 건설업이나 광산업이나 도로운수에서 중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사고와 관련되는 노동자, 시민을 조직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투쟁하는 것이 결국 법제도를 만드는 계기였다. 왜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법은 정부의 권력에 반하는, 정부의 이해에 반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 정부 뒤에 있는 기업, 전반적인 경제에 반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투쟁이다. 지금 보기에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영국 · 호주 노동조합 대표와 함께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이윤추구는 '살인행위'다.



영국 법 제정할 때 반대여론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생각보다 기업의 반대 로비가 높지 않았다. 단체협약을 맺고 노조와 괜찮은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 기업들이 오히려 지지했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이나 건강 규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 잘 지키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좋다. 호주도 비슷했다. 일부 기업이 지지했다.

다른 이유도 있다. 결국 노동당이 추진한 법안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강하지 않았다. 우리의 핵심 조항은 기업의 고위 간부에 개별 책임과 징역 받을 수 있는 걸 원했는데 노동당이 추진한 법안에선 그 부분은 삭제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별 간부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통과하기 쉬웠다. 그 부분도 없지 않았다.

법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다. 그 중에 정부책임, 왕립 기구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논쟁이 있었다(공무원과 공공부문). 결국 그 싸움을 이겨서 공공부문 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법 제정할 때 호주는 어땠나.

2002-2003년 뉴사우스웨스트 주와 수도 캔버라가 있는 주에서 기업살인법이 도입되었는데, 제일 강한 법제도는 수도에 있는 것이다. 5개 주에 법이 있다고 말했는데, 제일 좋은 법은 수도 주에 있다. 2002년-2003년 기업살인법 제정투쟁을 했을 때, 특히 뉴사우스웨스트 주 건설현장에서 일주일에 한명씩 사망하고 있었다. 대대적인 연대체를 만들고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큰 집회 투쟁을 많이 했다. 여기도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투쟁을 크게 했고, 그 투쟁을 통해서 법 쟁취했다.

기업살인법 제정 그리고 노동안전보건법 내용 강화 그리고 안전운임법 세 가지 법 제도 제개정 운동을 했다. 원청 또는 책임의 사슬, 하청구조의 정점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했다. 자본을 분리해서 맨 위에 있는 자본을 상대로 싸웠는데 바로 밑에 있는 첫 단계의 하청업체들과 연대하게 되었다. 도로운수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맨 위에 있는 화주, 제조업이나 유통업의 대기업 바로 밑에 물류기업, 그 밑에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가 있는데 우리가 특수고용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모든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밑에 있는 물류 기업들을 압박하고 외주화를 했다. 중간단계 기업들이 누구 편을 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물류회사랑 연대해서 대기업에 맞서 싸우자 제안했고, 이는 법을 쟁취하는데 중요한 정책이었다.

영국 산재 사망률이 매우 낮은데, 기업살인법 도입 이후 생긴 변화들인지?

산재사망률이 최근 10년 동안 많이 떨어졌다. 그건 꼭 기업살인법 제정 한가지 때문은 아니다. 기업살인법 제정도 있고, 성공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큰 사건도 있고, 과실 관련한 재판도 성공적으로 노조가 주도한 사건들이었다. 그리고 안전한 사업장에 대한 노조의 투쟁도 있었다. 기업살인법은 한 가지 요인이었다. 전반적으로 노조의 다양한 활동이 합쳐져 최근 10년 안에 많이 좋아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아직도 투쟁하고 있고 매해 4.28일 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에 행사와 집회를 하고 산재문제 제기하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경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경제성장이라는 이유로 기업가 처벌을 중요시 하고 징역을 가도 석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업가 처벌을 꺼리는 한국 정부에게 한마디 한다면?

영국 일단 잘못된 생각이다. 멍청한 생각이다. 안전한 성장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 규제를 풀면 경제가 충격이나 재해에 취약하다. 기업의 관련 규제를 풀었을 때 노동안전 문제를 포함한 충격이나 문제들이 쉽게 발견된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업과 시민사회에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규제가 풀리고 튼튼한 법 제도가 없으면 신뢰를 형성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매우 멍청하다.

호주 정부가 무조건 정부의 권력을 유지하는 기업의 편을 드는 것이 장기적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면 국민들이 정부와 기업간 유착관계에 맞서 싸울 것이고,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기업들이 노동자를 자유롭게 착취할 것이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싸울 것이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다.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재욱 어머니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부모들이 왜 싸우냐면, 세월호 참사는 사고를 사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부나 기업이 결탁해서 권력 유지를 위해 이윤 추구를 위해 생명을 도구로 이용했다. 가장 근본적인 인간 존엄, 생명존엄의 가치를 이 싸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싸움을 거치면서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것은 절대로 용서되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저희 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저희는 이제 시작이지만, 먼저 비슷한 싸움을 거쳐 법을 제정 한 것에 대해서 귀감이 되고, 우리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테니 함께 지켜봐주고 했으면 좋겠다. 노동과건강 | 92